

“항일독립운동 왜곡 기점 바로잡아야”

민주 윤준병 의원 등, “보훈부, 전향적 태도 변화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6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리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전 국회 소트관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밝기만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으며, 이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며,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 식민상태’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을 정해놓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명확히 정의돼 있고, ‘전봉준공조’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이자 국권수호운동을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전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축,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

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신앙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국가보훈부와 국민연대는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7월 29일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 등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6일 오전 국회 소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독립운동 왜곡 기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13일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 국회 토론회’를 열어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정부가 60년 넘게 답습해 오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준병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DJ 자택 매각 결정 철회해야”

이낙연 전 총리 “동교동,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
정치권·공공기관 등에 등록문화유산 등록 등 요청

이낙연 전 국무총리(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부당민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곳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꿈을 꾸며 한 시대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겐 삶이 일부였다. 외람되지만 저에게도 신문 기자로서 30대의 시간을 가장 오래 보낸 곳이기도 하다”고 덧붙혔다. 이 전 총리는 “‘동교동’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고난과 희생, 인내와 저항 위에서 싹튼지를 알리는 장소로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을 검토하자. ‘시·도 등록문화유산’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저 매각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재훈 기자

문화상품 창작 자금, 금융기관서 조달 가능

민주 김윤덕 의원, 법안 발의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행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 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법 333개 특례 연말 시행...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자치도, 김관영 지사 주재
특례 실행 추진 상황 보고회
특례별 쟁점 방안 등 논의



6일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상반기 준비상황 점검과 특례별 쟁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실행에 대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상황을 점검하고 더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 실행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상반기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쟁점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와 제도 마련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들을 분류해 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시행일이 되면 75건의 특례 중 대략 50% 정도가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전복 철단과화단지 조성과 같은 중장기성 특례들은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설정하는 단계로 기본규정을 총 26건을 추진했고, 기본 실시계획은 총 24건, 내년 이후에는 7건이 추진된다.

관련 제도 마련으로는 조례가 상반기에 17건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30건 이상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 시행령 1건은 총 30개 조문으로 8월 중으로 입법 예고될 계획이다.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특례인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등 14개 지구·특

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기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후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말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 131개 조문이 100% 실현되도록 연초에 특례 실행 준비계획 절차를 확정하고 준비 상황에 대해 매월 실무담당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입법 과정에서는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자”라며, “내년에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나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재정지원, 지도·감독,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시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후보자 A는 선거사무장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장장치를 구입하면서 해당 선거비용 2,380 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특례 실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입법 과정에서는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자”라며, “내년에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익산시 정책감담회

전북여성정책연구소(소장 유은경)는 6일 익산시를 방문해 정책감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200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된 국내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역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등을 개선하기로 한 지역을 여성가족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감담회에는 익산시 여성가족과 김선아 계장, 김지연 주무관, 여성정책연구소 유은경 소장, 백미륵 연구위원, 거점형양성평등센터 순미혜 센터장, 성별영향평가센터 김현숙 컨설턴트, 조아영 전담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성주류와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은성 기자



6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영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주제로 한 ‘전북 백년포럼’ 제8강이 열렸다.

“해외 우수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요인 분석 필요”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정진현 서울대 교수 초청 특강

전북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전문지식, 산업인프라, 자금조달, 정부지원 등 기존의 전략 외에 창업문화 활성화, 혁신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6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영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8강을 개최했다.

포럼 강연자는 서울대 SNU바이오인력양성센터 정진현 교수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화학과 이화학사이자 세계비경구의약협회(PDA) 한국지부 회장을 겸임 중이다.

정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 역사와 진화 과정을 살펴본 뒤 산업 환경 변화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다.

정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많은

이해 집단을 필요로 하는 집약적 규제 산업의 특성을 가지므로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해외 우수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 요인을 보면 지식기반 및 전문지식, 산업인프라, 자금조달 및 투자, 정부 지원 외에 스타트업 활동, 혁신 활동도 필수적이다”라며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 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선관위,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 3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총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으로 선거구내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등 선거사무관계자 6인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으며,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